

# 檢, 철도시설공단 압수수색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특정업체에 일감 주기 의혹

검찰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 주기 의혹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김현철)은 지난 16일 오후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해 원주시 태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와 간부 A씨 숙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중 연약지반으로 인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

체가 10억원가량의 설계 계약을 한 정황 등을 잡고 그 과정에서 간부 A씨가 특혜를 줬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서, 결제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사와 관련한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발주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마련됐으며 2017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준 의혹이 있어 관련 자료를 확인, 혐의 유무를 파악하는 시작 단계”라고 했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

#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자금지원 확대 나선다

조합원별 담보용자 한도 최대 500억원으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 건설경기 부진으로 돈 가뭄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건설공제조합은 담보용자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조합원 자금지원 확대방안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조합원별 담보용자 한도를 담보금액 기준으로 최대 500억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종전에는 조합원별 담보용자 한도가 출자금액 기준이어서 출자금액이 적은 조합원들이 애로를 겪었다.

담보용자 총 한도는 선제적으로 88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담보용자 수가 2014년 590억원, 2016년 2492억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인 점을 반영했다.

동시에 담보용자 이자율은 제1금융권보다 낮은 최저 2.4%에서 최고 5.5%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중견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 용자금액 규모에 따라 본부 승인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신용등급 및 용자 이용 규모에 따른 가산 이자율을 신설해 우량업체를 우대하고 용자가 소수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올해 7월 현재 조합원에게 무담보(신용) 용자 2조4000억원, 담보용자 2500억원 등 약 2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체 자금조달 비중은 은

행 55%, 조합 36%로 조합은 자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런 지위에 걸맞게 조합은 보유 재원과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 조합원의 유동성 지원 및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사들의 살림살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 건설사는 여전히 양질의 일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제1금융권 대출은 어렵고, 이자 등 금융비용이 높은 대부업을 마지 못해 이용해야 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견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권으로부터 5대 취약업종으로 분류돼 투자와 대출이 축소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업체의 올해 1분기 자금유동성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이상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준기자 newspia@